

경제논집 특집

정책논단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

□ 편집자 주: 이 특집 정책논단은 2022년 11월 24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인구클러스터 포럼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각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엄밀하게 제시해주는 연구는 의외로 부족할 실정이다. 이 특집 정책논단은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수량적으로 추정하고,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용, 보육의 기회비용, 가치관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이 철 희

한국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2015년 이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 이후 1.3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했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하여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2/4분기에는 0.75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21년에는 26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미래를 받아들이고, 인구정책의 목표를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처럼 정책 목표를 전환하더라도 출생아 수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노력은 여전히 요구된다. 장래 인구변화의 양상과 추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출생아 수 변화 규모와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출생아 수가 2024년경 이후 반등할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는 낙관적인 전망일 가능성이 높다. 출생아 수가 계속 빠르게 감소한다면, 최근의 통계청 추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장기적인 감소 추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그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출산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높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생애 및 다음 세대에 대한 청년들의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엄밀한 실증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 감소의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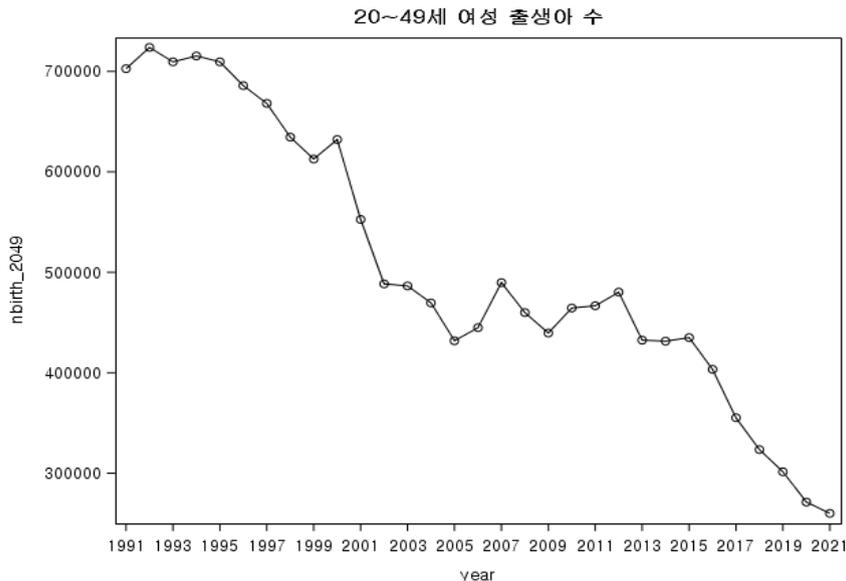
이 글은 출생아 수 감소의 근본적인 사회경제적·문화적 원인 자체를 다루기에 앞서서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생아 수는 출산율과 가임기 여성 인구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혼외 출산이 전체 출산의 매우 작은 부분(약 2% 정도)을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유배우 비율(전체 여성 중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이 출산율을 좌우한다.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는 자녀 수에 따른 유배우 출산율, 즉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율, 다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율과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의 상대적인 비중(가중치)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유배우 비율의 변화는 미혼·비혼 여성의 비율, 이혼해 있는 여성의 비율, 사별해있는 여성 비율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유배우 여성의 이혼율과 사별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출생아 수 감소의 세부적인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각각의 요인이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저출산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각각의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미혼자들의 결혼 결정과 결혼한 부부의 출산 결정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 유배우 비율 및 무배우 혼인율은 유배우 출산율과는 횡단면이나 시계열적으로 상이한 변이를 보였다. 예컨대 연도·시군도별 데이터에 기초한 결과는 여성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사이에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이철희 2012). 과거의 일부 기간(예컨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는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 비율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이철희 2018). 현재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과거의 출산율 변화의 산물로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과는 무관하며, 사별률은 사망률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각각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각 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정책은 미혼 인구의 결혼 결정보다는 유배우 인구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유배우 비율의 영향을 받는 합계출산율보다 유배우 출산율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희 2019, 이철희·이소영 2022). 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은 결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사별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구학적 요인이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요인인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다를 수 있다.

아래에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1990년 이후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을 분해한 이철희(2022)의 결과를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 이후 20세 미만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너무 적어서 이 연령층 출생아 수 변화를 더 세밀한 요인으로 분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20세 이상 여성 인구의 출생아 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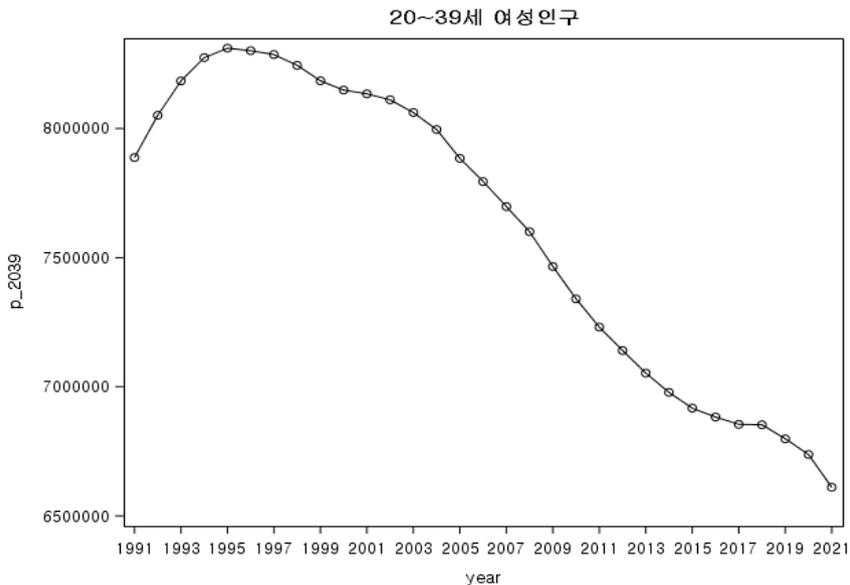


출처: 이철희(2022)

〈그림 1〉 1990년~2021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그림 1〉은 1991년~2021년 20세 이상 여성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 변화를 보여 준다. 1990년대 초 70만 명이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1990년대를 통해 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2005년 사이 급감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45만 명 선에서 등락하였다. 2015년부터 출생아 수는 연속적으로 급감하여 2019년 3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1년에는 약 26만 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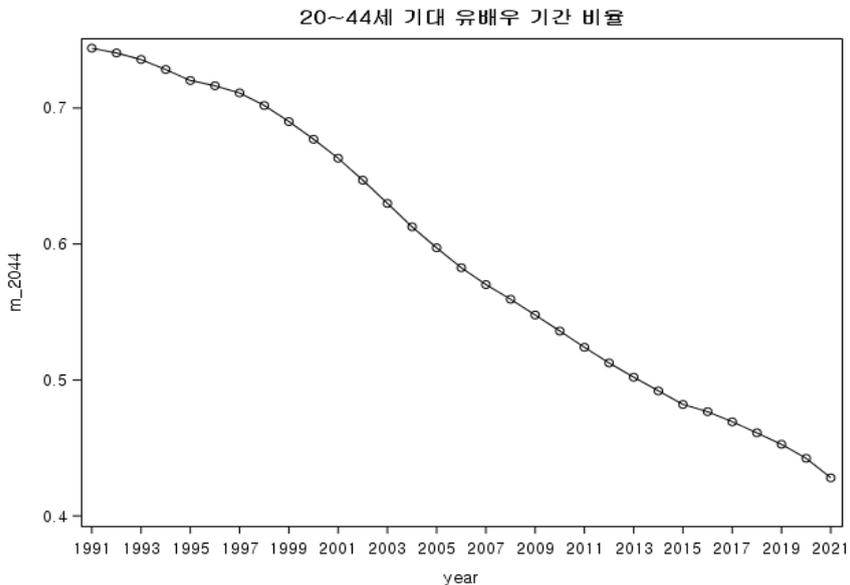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떤 인구학적 요인들이 이러한 추이의 출생아 수 감소를 가져왔을까? 첫째, 1990년대 초 이후 여성 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가 보여주는 것처럼 20~49세 여성 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감소해 왔다. 따라서 이 기간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여성 인구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인구의 감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매우 가파른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바꿀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이철희(2022)

〈그림 2〉 1990년~2021년 20~49세 여성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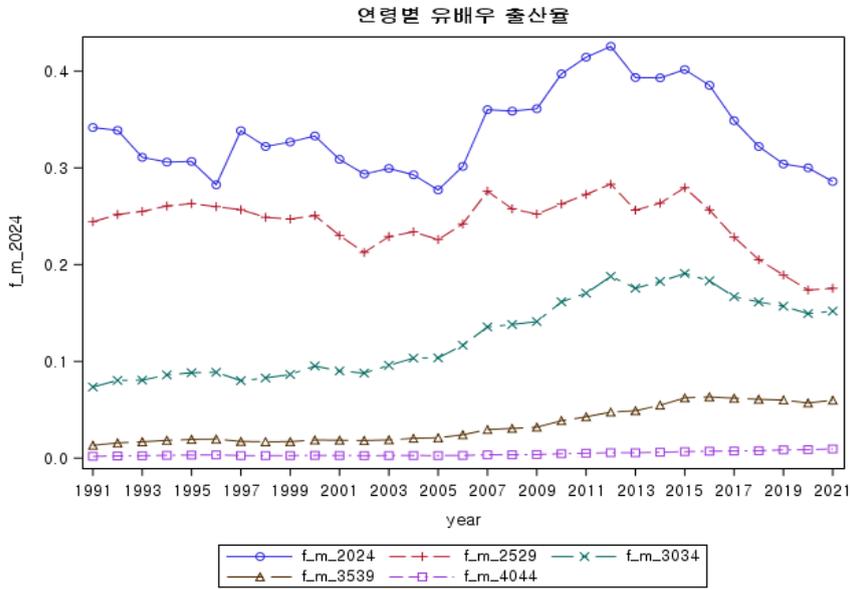
둘째, 비혼의 확산과 만혼 경향의 강화로 인해 가임기 여성 인구 중 유배우 인구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림 3>은 각 연도별로 20세의 여성이 44세까지의 기간 중 유배우 상태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1990년대 초에는 주된 가임연령인 20~44세 시기의 70% 이상을 유배우 상태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 비율이 40%에 근접해 있다. 여전히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여건에서 이러한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미혼·비혼 여성 인구 비율 증가가 여성 무배우 비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이철희 2022). 이혼의 증가도 유배우 비율 감소를 가져온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지만 이 효과는 사망률 감소로 말미암은 사별 여성 비율 감소 효과에 의해 대부분 상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이철희(2022)

<그림 3> 1991년~2021년 20~44세 기대 유배우 기간 비율

셋째,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유배우 출산율은 시기에 따라 다른 추이를 보이며 변화하였다. <그림 4>는 1991년~2021년 각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1년~2005년 기간에는 20대 유배우 출산율은 약간 하락하였고, 30대 초반 유배우 출산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2005년~2012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의 유배우 출산율이 모두 높아졌으며, 2012년~2021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2005년~2012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그 이후에는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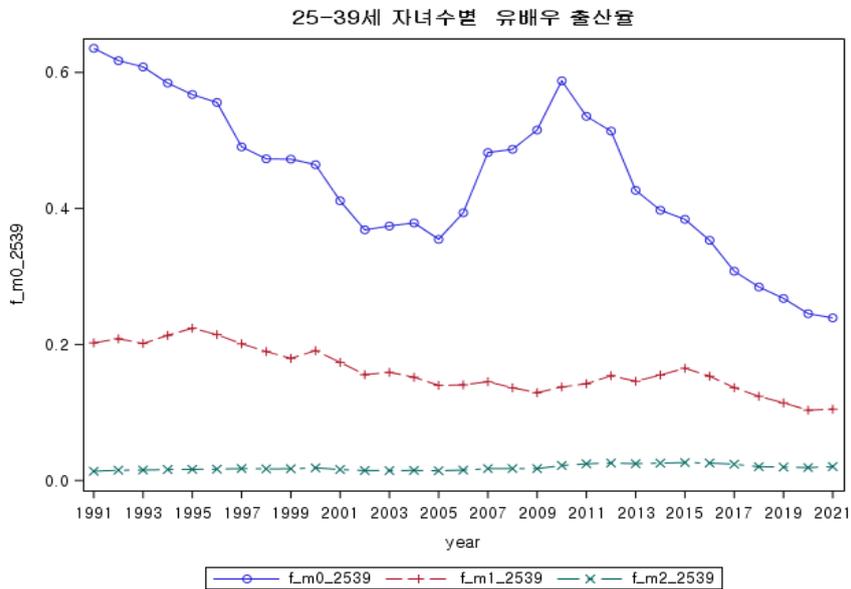


출처: 이철희(2022)

<그림 4> 1991년~2021년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넷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의 변화는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다. <그림 5>는 1991년~2021년 핵심적인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 25~39세 유배우 여성의 자녀 수별 출산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유배우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반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은 매우 뚜렷한 단기적 변동성을 보인다. 즉 1991년~2005년 기간에는 감소하였고, 2005년~2012년 기간에는 증가했다가, 2012년~2021년 기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가 1990년 이후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출처: 이철희(2022)

〈그림 5〉 1991년~2021년 25~39세 여성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분해식을 이용하여 이상의 요인들이 시기별로 출생아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 한 결과는 위의 그림들에 나타난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1992년~2005년 기간에는 20세 이상 여성 출생아 수가 약 292,000명 감소했는데, 그 가운데 약 24만 명(전체 출생아 수 감소의 88.7%)은 유배우 비율 감소로 설명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는 약 39,000명(14.3%),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는 약 14,000명(5.1%)의 출생아 수 감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2012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가 약 48,000명 늘었다. 이 시기에 유배우 비율은 감소하여 출생아 수를 약 104,000명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가임기 여성 인구도 줄어서 출생아 수를 약 43,000명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출생아 수를 약 178,000명 늘림으로써 다른 두 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하였다.

2012년~2021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가 약 22만 명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주된 인구학적 요인이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약 106,000명(48.1%), 유배우 출산율은 약 89,000명(40.1%),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는 약 4만 명(18.0%)의 출생아 감소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감소는 출생아 수를 약 129,000명(58.5%)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가중치)은 전 기간에 걸쳐서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1990년 이후, 출산율 수준이 가장 높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전체 유배우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지난 7년 혹은 10년 동안의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상수”였던 결혼의 감소에 2012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결혼(혹은 안정적인 동거)의 감소 추이를 완화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의 감소는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출생아 수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과거에는 특정 연령층의 혼인율이 낮아지면 이후 더 높은 연령층의 혼인율이 높아지는 만혼화가 진행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30대 후반의 무배우 여성 혼인율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만혼의 비혼화가 실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여성 유배우 비율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한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낮아진 유배우 비율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혼의 증가는 결혼 감소로 인한 여성 유배우 비율 감소 추이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와는 달리 사별 위험이 이미 매우 낮아져서 더이상 사별 인구 감소가 이혼인구 증

가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다자녀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초점을 첫 아이 출생에 맞출 필요가 있다. 다자녀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율은 매우 낮고 변동성이 낮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은 두 번째 자녀 및 세 번째 이상 자녀 출산율에 비해 훨씬 높고 변동성이 크다. 지난 30년 동안의 유배우 출산율의 시간적인 변동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현금지원과 같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가 첫 자녀 출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철희 2019; 이철희 · 이소영 2022). 더욱이 전체 유배우 여성 가운데 무자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져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첫 자녀 출산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이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 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6379

메일:chullee@snu.ac.kr

참고문헌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 2016년 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이철희 (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제6장: 지자체 출산 지원금의 효과-아동수당의 기대효과에 대한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37.
- 이철희 (2022):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1991~2021”, 미 발표 논문.
- 이철희, 이소영 (2022):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경제학연구』, 제70집, 제2호, 61-93.

주거비용과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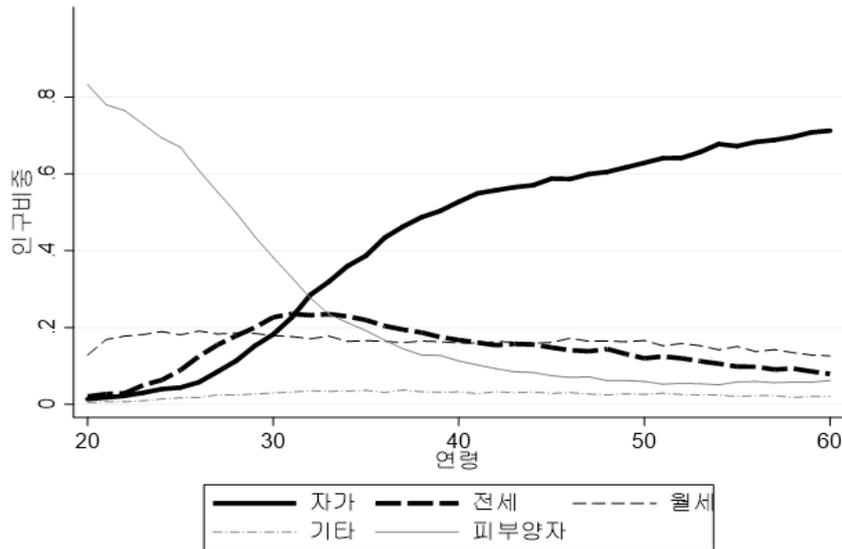
이 영 욱

1. 문제제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러 출산·양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출산양육비용 이외의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비용은 여러 경제·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거는 가족 형성에 있어 필수적이며, 비용 규모도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나타난다. 상당수의 청년층이 결혼, 출산을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임차 또는 자가 가구로 이행하거나, 기존 임차 가구에서 주택마련을 통해 자가 가구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가운데 미래의 소득 흐름이 아직 불확실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하에서 상당한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가격의 변동은 청년층의 가족 형성, 특히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생애주기별 주거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는 월세(반전세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게 유지되며 30대 전후로는 전세 비중이 가장 높게 관찰된다. 한편, 자가 비중은 20대 중반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0대 초반 이후로 가장 높게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청년의 시기에 주거 형태 변화가 크게 관찰되고 있어 청년층의 가족 형성 결정에 주택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가족 형성 결정에 있어 임차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Han and Lee(2022)의 2015년 수치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여성에 한정하여 연령별 주거형태 비중추이를 살펴봄. 자가, 전세, 월세, 기타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여성에 한해 정의되며, 이외 여성은 피부양자로 정의,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그림 6〉 여성 연령에 따른 주거형태(2020년)

2. 주거비용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택가격 또는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선 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가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며 재산 증가에 따라 자녀 출산이 증가하는 재산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Lovenheim and Mumford 2013; Dettling and Kearney 2014; Aksoy 2016).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변동에 그쳐 영구적인 재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담보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치 상승은 차입제약에 처해 있는 청년 가구의 차입 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출산의 제약을 완화시켜 출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Dettling and Kearney, 2014).

한편,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소유의 어려움을 높여 가족 형성을 지연시키는 가격 효과(price effect)를 야기할 수 있다(Mulder and Billari, 2010). 이는 주택 소유 계획을 가진 임차 가구뿐 아니라 출산과 더불어 더 큰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존 주택 소유 가구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은 임차 가구에 직접적인 주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주택가격과 출산에 대한 해외연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Lovenheim and Mumford 2013; Dettling and Kearney 2014; Aksoy 2016; Clark and Ferrer, 2019; Atalay et al., 2021).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출산확률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Dettling and Kearney 2014; Aksoy 2016). 예를 들어 Lovenheim and Mumford (2013)은 미국 1985-2007년 PSID 자료를 활용한 개인 단위 분석에서 \$10,000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1.6~1.8% 증가시킴을 보였다. Dettling and Kearney (2014)도 미국 1990-2007년 MSA 단위 분석에서 \$10,000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5% 증가시키는 반면, 미 소유자의 출산확률을 2.4% 감소시킴을 관찰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Aksoy (2016)는 1995-2013년 county 단위 분석에서 10%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2.8% 증가시키는 반면, 미 소유자의 출산확률을 4.9% 감소시킴을 보인 바 있다.

4. 주택가격의 출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고려할 점

이러한 주택가격의 출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어려운 점은 주택가격과 출산 간에 양방향의 관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나 주택가격과 출산 간의 단순한 관계 분석 하에서는 출산수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를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출산의향이 있는 청년들이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에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주택 수요

가 높아져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의 인과관계 우려가 있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거나 개인 단위 분석에서 지역 단위 주택 가격상승분을 적용하는 등 주택가격의 출산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Dettling and Kearney (2014)와 Aksoy (2016)는 지리적 특성, 주택 계획 제한 등 주택공급제약에 대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의 출산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산과 강의 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이거나 주택계획제한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주택가격 상승에 반응하여 주택공급을 늘일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와 같이 주택공급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전국 단위의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공급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택공급 제약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 아닌 주택공급부문에 의한 주택가격 변화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우려하였던 주택 수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ettling and Kearney, 2014).

5. 우리나라에서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에서의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 유사하게 주택공급제약과 관련된 도구변수를 활용해 볼 수 있다. Han and Lee (2022)에서는 시군구별 개발제한구역 비중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지정된 후 1999년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2000년 이후로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이에 분석에서는 1999년까지의 개발제한구역 비중을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주택 수요 변화분과는 별개로 강제 지정된 주택공급제약요인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초점을 맞춘 매매가격뿐 아니라 임차가격의 출산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출산 시기의 청년층에서 임차 비중이 높게 관찰되기에 임차가격의 출산 효과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따르면, 이러한 임차가격의 출산 효과는 별도로 살펴보기 힘든데, 이는 월세 계약에 의존한 임차 비중이 높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월세 임차료의 경우 명목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임차가격이 출

산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라는 독특한 계약형태를 활용하여 임차가격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전세 가격은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월세와 비교하여 가격 변동 폭이 상당히 큰 특징을 가진다.

관련 분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매매가격의 증가는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높이거나 주택 미소유 가구의 출산확률을 감소시키며, 전세 가격의 증가는 전세임차인의 출산확률을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Han and Lee, 2022).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매매가격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앞선 기존 연구결과들과 동일하다.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을 함께 통제된 분석에서는 전세 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매매가격, 즉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분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Han and Lee, 2022). 이러한 결과는 전세 가격으로 대표되는 주거비용 또는 현재의 주거 가치가 출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연령별 효과를 나누어 살펴본 분석에서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주거비용이 임차인의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관찰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소유자의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Han and Lee, 2022). 이러한 분석 결과는 30대까지는 임차비중이 높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비중이 높아지는 연령별 주거형태 추이를 반영한다.

6. 정책적 시사점

분석 결과는 출산 지원에 있어 주거비용 경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임차료 지원정책은 임차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출산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차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청년층 대상 임차료 지원은 출산 지원정책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임차료를 통제하는 정책은 임차 가능 주택의 양(quantity)을 함께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에 오히려 가족 형성을 위한 주택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Han and Lee, 2022). 또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이 영 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화: 044.550.4397

메일: ywlee@kdi.re.kr

참고문헌

- Aksoy, C. G. (2016): “Short-term effects of house prices on birth rates”, EBRD working paper.
- Atalay, K., A. Li, and S. Whelan (2021): “Housing wealth, fertility intentions and fertility”,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54, 101787.
- Clark, J. and A. Ferrer (2019): “The effect of house prices on fertility: Evidence from Canada” *Economics*, 13 (1).
- Dettling, L. J. and M. S. Kearney (2014):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0, 82–100.
- Han, J. and Y. Lee (2022): “The Effects of House Prices and Rents on Birth Rates: Evidence from Korea”.
- Lovenheim, M. F. and K. J. Mumford (2013): “Do family wealth shocks affect fertility choices? Evidence from the housing marke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 (2), 464–475.
- Mulder, C. H. and F. C. Billari (2010). Homeownership regimes and low fertility. *Housing Studies* 25 (4), 527–541.

자녀 교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김 대 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왔고, 최근 2021년에는 0.8명으로까지 하락하였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불과 14년이 지난 1984년에 1.74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당시 인구과밀을 우려한 산아제한 정책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산아제한 정책이 철폐된 이후의 합계 출산율은 다소의 등락을 거듭하며 35년 동안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8년 1.0 미만으로 하락하여 현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인다.

현시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70년대의 산아제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하락시킬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에게서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 관념이 약화 되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경제발전으로 인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확대가 과거에는 가정에 머무르던 여성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ICT 기술의 진보는 힘(brawn)보다는 사고력(brain)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이러한 자리에는 여성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빠르게 개선되고, 학교를 졸업한 20대 미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결혼한 여성에게는 일·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해서 사회 참여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여건에서 출산을 자제하자는 산아제한 정책은, 당시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던 기혼 여성들의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이었고, “수요에 부응한” 정책은 합계 출산율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2022년 현시점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열망은 1970~80년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높지만,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현실은 여성들에게 일도 더하고 출산도 더 하라는 불가능한 조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여성들은 아직도 일과 가정의 상충 속에서 부득이하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저출산은 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미혼 여성들의 선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만혼과 비혼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취업 상태의 여성일수록 결혼할 확률도 낮고,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출산할 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국현·김대일, 2016). 현시점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저울질은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때 부득이 일을 포기하였던 1970년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지난 10년간 200조 원이 넘는 지출에도 저출산 정책이 출산을 하락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간의 정책은 아동 수당, 보육료 지원 등 금전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도와줄 육아휴직 확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저출산은 더이상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표에 의하면 40~45세 기혼 여성들을 부부 소득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녀 수 차이가 0.16명에 불과하여 소득 수준별로 자녀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월 784만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노벨상 수상자인 Gary S. Becker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현대 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금전적인 비용보다 어머니들의 시간 비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 소득 수준별 기혼 여성의 자녀 수

40~45세 유배우자 기혼 여성		부부소득				
		하위 20%	차상위 20%	중위 20%	차하위 20%	상위 20%
2013년	자녀 수(명)	1.68	1.87	1.77	1.93	1.85
	소득(만원/월)	183.3	304.0	397.0	523.3	809.0
2020년	자녀 수(명)	1.69	1.75	1.88	1.77	1.85
	소득(만원/월)	247.2	390.6	484.4	606.6	1,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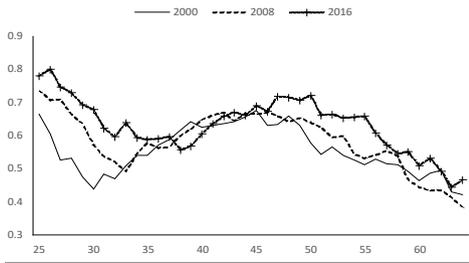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각 년도

어머니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필요한데 정책은 금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기존 정책은 수요에 잘 부응한 정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출산 추세를 둔화시키거나 반전시킬 수 있으려면 어머니들의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정책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어머니들에게 일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돌보는 정책에 불과하므로 현시점에서 어머니들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어머니들이 굳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즉, 어머니들을 자녀 양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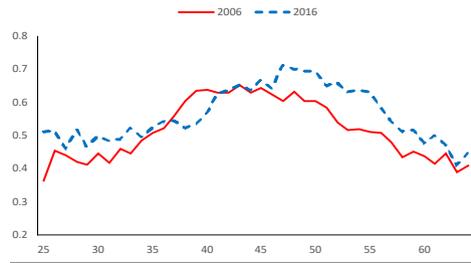
어머니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녀에게서 어머니들이 일·가정 양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자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각 학교급별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자녀 유형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한다.⁽¹⁾ 지금까지는 신생아와 3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도 영유아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심화 되는 양상은 오히려 취학 자녀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은 여성의 연령대 취업률을 비교하고 있는데, 연령별 취업률은 전형적인 M-자 형을 보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위치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30대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반영하는 취업률 최저점 연령은 2000년 30세에서 2016년 38세로 증가하였는데, 동일 기간 내 초혼 연령은 26.5세에서 30.1세로 3.6세 증가하는데에 그치고 있어 최저점 연령이 증가한 것이 만혼 추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1) 아래에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는 김대일(2018)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혀 둔다.



출처: 김대일(2018)



출처: 김대일(2018)

〈그림 7〉 여성 연령별 취업률

〈그림 8〉 기혼 여성 연령별 취업률

기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비교한 〈그림 8〉에 의하면, 2006년과 2016년 기간 동안 유독 37~42세 연령층에서 취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그림 7〉의 최저점 연령 이동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기준 37~42세 기혼 여성은 평균적으로 초혼 연령이 27~28세 수준이었던 2002~07년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의 취업률이 감소한 것이 3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결혼 이후 10년 이상 지난 여성들에게서 취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보다 연령이 높은 자녀들의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급별 자녀가 어머니 취업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도 어머니의 취업확률을 각 학교급별 자녀 수의 함수로 추정한 결과를 비교한다.⁽²⁾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2006년과 2016년에 관측된 25~64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자녀가 취업률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 의하면 3세 이하 영유아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미치는 효과의 추정계수는 2006년 -.938에서 2016년 -.685(절대값으로)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한계효과로 전환할 경우, 2006년 -.234에서 2016년 -.169로 나타난다.⁽³⁾ 즉, 3세 이하 영유아가 2006년에는 어머니의 취업률을 23.4% 낮추었지만, 2016년에는 16.9%로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하

(2) 추정 모형은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녀 변수 이외에 어머니 본인의 학력, 연령의 2차 함수 및 로그 비근로 소득을 통제하였다.

(3) 2006년과 2016년 표본의 취업률은 51.0%와 56.3%이며, 한계효과는 로짓 모형의 특성상 추정계수에 취업률*(1-취업률)을 곱하여 추정되었다.

였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4~6세 미취학 자녀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이 감소하는 효과를 추정하면, 2006년 11.1%에서 2016년 7.9%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미취학 자녀들이 어머니 취업에는 아직도 부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기혼 여성 취업에 미치는 자녀의 효과 추정(로짓 모형)

	2006년	2016년
자녀 없음=1	.324 (.095)***	.273 (.118)**
3세 이하 자녀 수	-.938 (.078)***	-.685 (.097)***
4~6세 자녀 수	-.443 (.070)***	-.323 (.088)***
초등학생 자녀 수	-.172 (.048)***	-.306 (.066)***
중학생 자녀 수	.122 (.065)*	.071 (.091)
고등학생 자녀 수	.135 (.070)*	-.001 (.089)
초졸 이상 자녀 수	.131 (.054)**	.240 (.074)***
log likelihood	-5,392.42	-3,326.3
관측치	8,400	5,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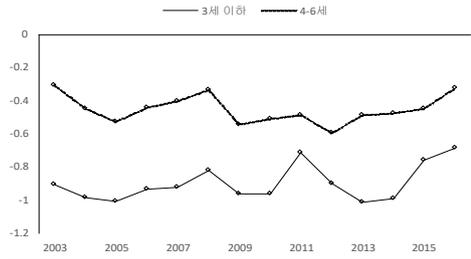
주: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 1% 수준에서 유의

표본은 25~64세 기혼 여성으로 한정. 괄호 안 수치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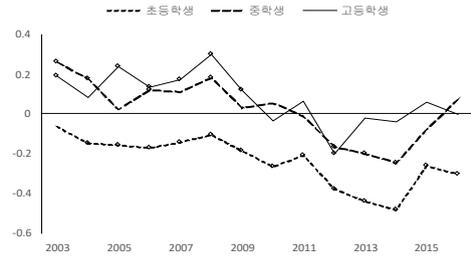
출처: 김대일(2018)

반면, 초등학생 이상 취학 자녀의 부정적 효과는 반대로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2006년 4.3%에서 2016년 7.5%로 증가하였고, 2006년 중학생 자녀는 어머니의 취업을 3.0%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고등학생 자녀도 어머니 취업을 3.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16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심화 되었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취학 자녀들의 경우 미취학 자녀들과 반대로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효과가 심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2006년과 2016년 두 시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뚜렷한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9-10>은 연도별로 추정된 학교급별 자녀의 추정계수를 보이는데, 3세 이하와 4~6세 자녀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취학 자녀에서는 뚜렷하게 그 효과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으로 올수록 취학 자녀들이 어머니의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심화되는 추세는 합계 출산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통상적으로 어머니 취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취학 자녀의 효과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학 자녀의 효과 변화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김대일(2018)



출처: 김대일(2018)

<그림 9> 학교급별 자녀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효과 추이 I

<그림 10> 학교급별 자녀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효과 추이 II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어머니의 시간 투입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자녀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취학 자녀라고 평가되며, 최근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배경에 미취학 자녀보다는 취학 자녀로 인해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는 양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취학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방과 후 돌봄이 어머니의 시간 투입을 줄여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취학 자녀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있어서 스위스, 칠레 등에서 방과 후 학교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멕시코와 칠레에서 학교 시간 연

장의 효과도 입증된 바가 있다.⁽⁴⁾ 특히 Takaku (2019)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시간 연장이 어머니의 시간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 입시제도로 인한 어머니의 시간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맹목적인 대입 준비기관이 아니라 10대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화를 거치며 성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이제는 어머니들을 영유아 자녀 보육뿐 아니라, 취학 자녀의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 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할수록, 저출산 대책에 지출되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고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대 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6364

메일: dikim@snu.ac.kr

(4) Felfe et al (2016), Contreras and Sepulveda (2016), Martinez and Peticara (2017), Padilla-Romo and Cabrera-Hernandez (2019) 및 Berthelon et al (202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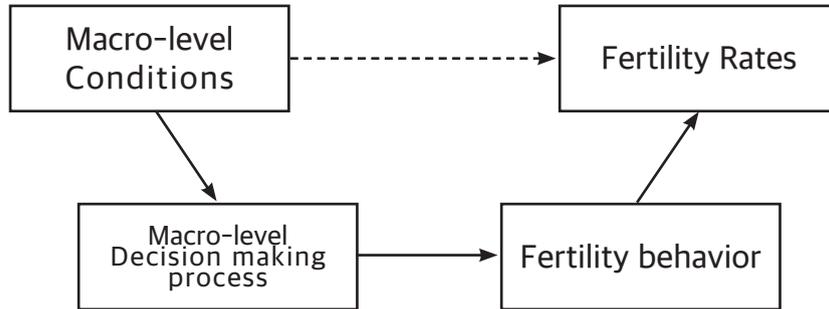
- 김대일(2018): “기혼 여성의 고용 변화와 자녀의 효과”, 『경제학 연구』, 제66권 제3호, 123-166.
- 남국현·김대일(2016):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25-52.
- Berthelon, Matias, Diana Kruger, and Melanie Oyarzun (2022): “School schedules and mothers’ employment: evidence from an education reform Review of Economics and Household”, Published online.
- Contreras, D., & Sepúlveda, P. (2016): “Effect of Lengthening the School Day on Mother’s Labor Supply”, *World Bank Economic Review*, 31(3), 747–66. <https://doi.org/10.1093/wber/lhw003>.
- Felfe, C., Lechner, M., & Thiemann, P. (2016): “After-school care and parents’ labor supply”, *Labour Economics*, 42, 64–75.
- Martínez, C., & Peticara, M. (2017): “Childcare Effects on Maternal Employment: Evidence from Chi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26, 127–37. <https://doi.org/10.1016/j.jdeveco.2017.01.001>.
- Padilla-Romo, M., & Cabrera-Hernández, F. (2019): “Easing the constraints of motherhood: the effects of all-day schools on mothers’ labor supply”, *Economic Inquiry*, 57, 890–909. <https://doi.org/10.1111/ecin.12740>.
- Takaku, R. (2019): “The wall for mothers with first graders: availability of afterschool childcare and continuity of maternal labor supply in Japa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7(1), 177–99. <https://doi.org/10.1007/s11150-017-9394-9>.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이 소 영

1. 배경

가치관이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의 행위를 계획하므로 가치관은 혼인과 출산, 자녀 양육과 이주(이동)와 같은 인구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한국인구학회, 2016, p.39). 개인의 출산 행동을 설명하는 가치관은 다음의 두 이론에서 발전되어왔다. 우선, 미시·거시 관점에서의 재생산 의사 결정 모형(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roject model)은 출산율(fertility rates)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을 도식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간접적으로는 거시적인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미시적인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거시적 차원의 국가 경제 상황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출산 행위에 이르게 된다. 이 모형에서는 미시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과 출산 행위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 계획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한 행위 이론에 따라 출산의 의도(intentions)는 의사 결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는 태도(attitude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인지한 행위의 통제(perceived behavioural control)에 의해 결정된다.



출처: Philipov 외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이소영 외 (2019,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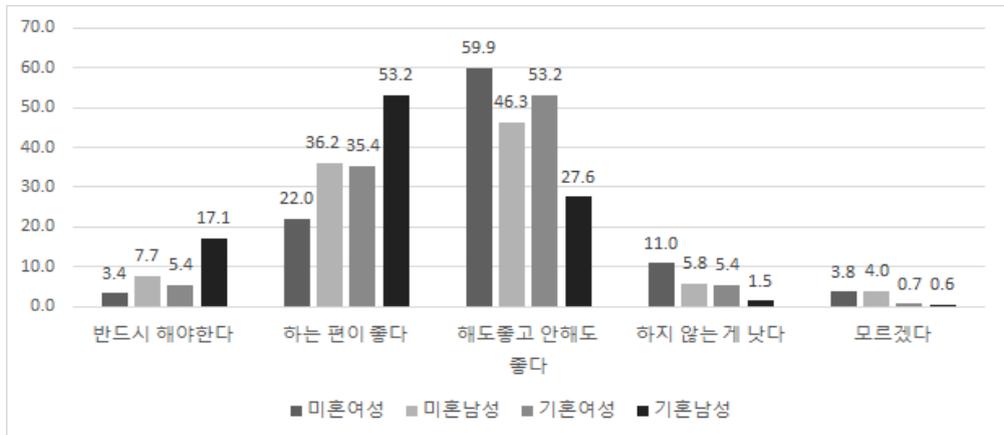
〈그림 11〉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roject Model

또한, 가치관의 변화는 제1차 인구변천이론(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출산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을 통해 출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1차 인구변천이론은 근대화, 산업화 이전의 고출생과 고사망의 균형에서 비약적인 인구 자연 증가 이후 저출생, 저사망이라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을 논의한다. 다시 말해 출산율의 변동이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재생산되는 대체출산율에서 멈추어 장래에는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구 자연 증감 수준은 항상성(homeostasis)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인 출산율의 하락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인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2차 인구변천이 등장하게 된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고의 전환(ideational changes)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가설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가치관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저출산이 지속화되고 고착화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서는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가치관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을 주기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를 생산한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한 종단적이며 횡단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49세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기혼남성에게서 가장 높았고(17.1%), 다음으로 미혼남성(7.7%), 기혼여성(5.4%), 미혼여성(3.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여성이 11%로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

(단위:%)



주: p= .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그림 12〉 19~49세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21

타났고 기혼남성의 경우는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한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21년 5.3%로 급감하였다. 긍정(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의 응답 비율은 2000년 약 39.7%에서 2021년 40.7%로 9%p 하락하였다. 또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유보적 견해는 2000년 44.2%에서 2021년 53.1%로 증가하였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

〈표 3〉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0~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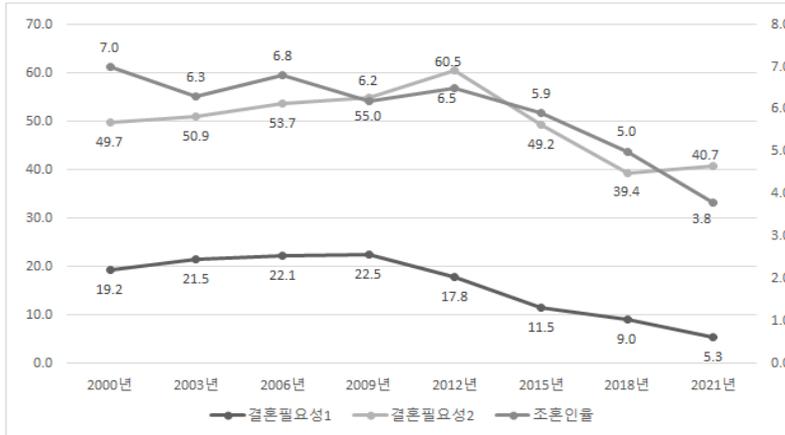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2000년	19.2	30.5	44.2	5.4	0.8	100
2003년	21.5	29.4	40.8	7.8	0.6	100
2006년	22.1	31.6	42.4	3.9	0.0	100
2009년	22.5	32.5	40.2	4.7	0.0	100
2012년	17.8	42.7	34.8	4.5	0.3	100
2015년	11.5	37.7	44.4	6.0	0.4	100
2018년	9.0	30.4	53.3	6.8	0.3	100
2021년	5.3	35.4	53.1	5.5	0.7	100

주: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라는 부정의 견해는 지난 21년 동안 유사한 수준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반드시 해야 한다) 및 동의(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의 비율과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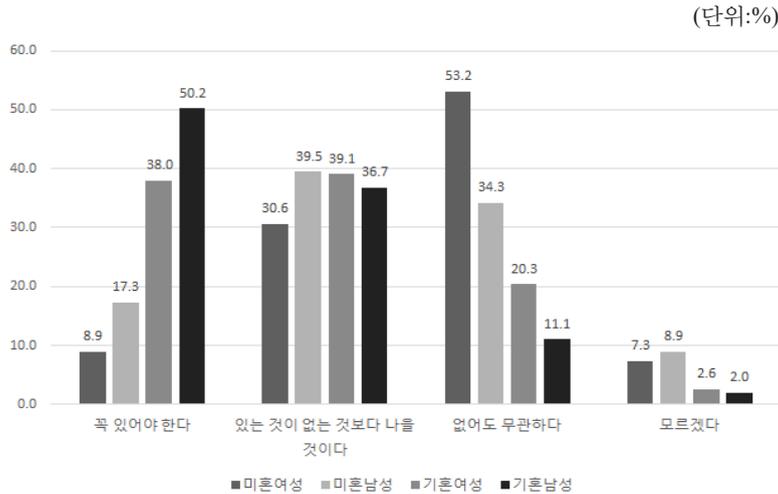
주1.: 필요성 1은 ‘반드시 해야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 2는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응답 비율의 합.

주2: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그림 13〉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과 조혼인율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결혼관의 변화는 자녀관의 변화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나타난 19~49세 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며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한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기혼남성(50.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혼여성(38.0%), 미혼남성(17.3%), 미혼여성(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하는 부정의 응답 비율은 미혼여성에게서 가장 높게(53.2%) 나타나고, 다음으로 미혼남성(34.3%), 기혼여성(20.3%), 기혼남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주.: p= .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그림 14〉 19~49세 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21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해보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강한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은 1985년 80.9%에서 2021년 38.0%로 42.9%p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부정의 응답은 1985년 8.9%에서 20.3%로 크게 증가하였다. 긍정(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의 응답 비율은 1985년 90.6%에서 2021년 77.1%로 13.5%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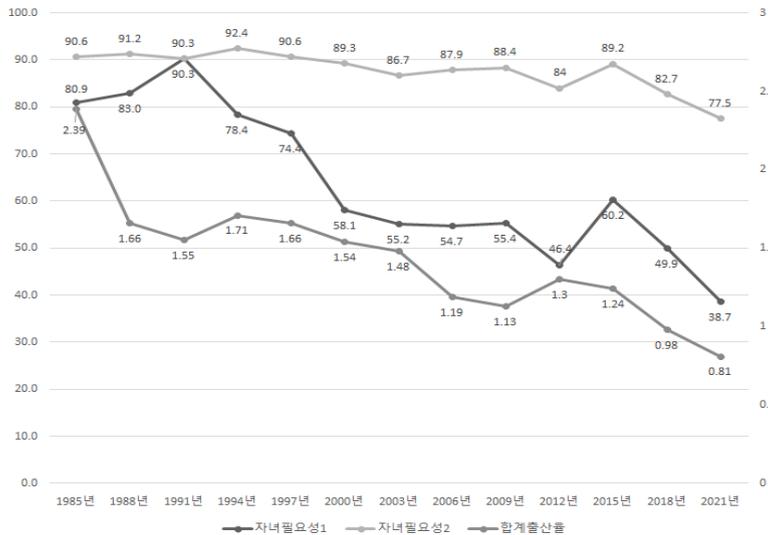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꼭 있어야 한다) 및 동의(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의 비율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2015년부터 강한 동의 및 동의의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85~2021 (단위: %)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
1985년	80.9	9.7	8.9	0.5	100.0
1988년	83.0	8.2	8.7	0.2	100.0
1991년	90.3	N/A	8.5	1.2	100.0
1994년	78.4	14.0	7.5	0.2	100.0
1997년	74.4	16.2	9.1	0.3	100.0
2000년	58.1	31.2	10.2	0.6	100.0
2003년	55.2	31.5	12.7	0.5	100.0
2006년	54.7	33.2	12.1	N/A	100.0
2009년	55.4	33.0	11.6	N/A	100.0
2012년	46.4	37.6	15.7	0.3	100.0
2015년	60.2	29.0	10.6	0.1	100.0
2018년	49.9	32.8	16.9	0.4	100.0
2021년	38.0	39.1	20.3	2.6	100.0

주: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1: 필요성 1은 ‘꼭 있어야 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 2는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응답 비율의 합. 주2: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그림 15〉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3. 가치관과 인구정책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 국가의 중장기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이 후 5년마다 수립되어 현재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서 드러난 가치관의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 그리고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라는 비전과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결혼 및 출산 연령층(25~34세)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의 경제적 요인,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와 같은 가치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치관을 저출산의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치관 요인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로 전략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실태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인식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교육과 홍보가 추진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과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으로 인구정책의 특성은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연관되었다고 규정하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일·가

정 양립 강화,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이 적절히 어우러진 정책 조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운동과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저출산이 초래할 심각성을 강조하는 국가적·애국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적·감성적 방향의 긍정적 가치관을 조성하고, 가족 및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양성평등 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의 인식과 환경 변화에 주력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및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인식을 전환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확대라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세부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사회·지리, 통합사회, 도덕, 가정(실과) 교육 과정에 건전한 가족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인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 교육과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직장교육을 통해 인식·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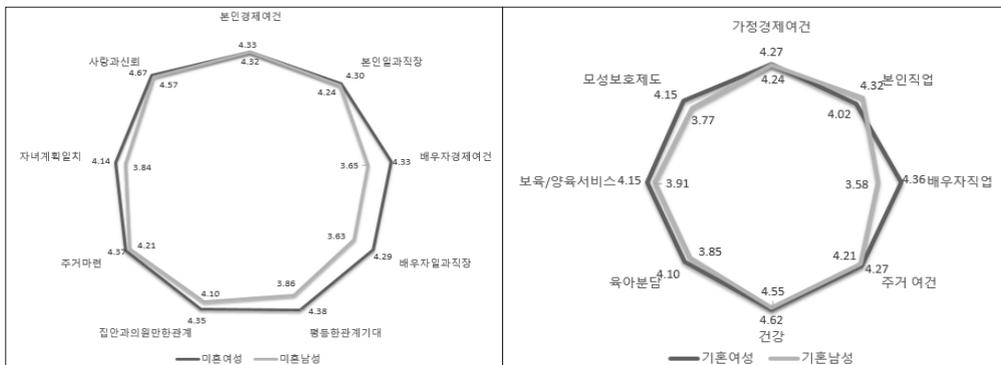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과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 등의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통적이며 경직적인 가족 규범과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과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청년층 가치관의 변화 등을 문화 가치관 측면의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강화 영역의 정책 방향의 하나로 가치관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가치관 및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족관계, 부모·자식 관계와 소통 방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가족문화를 모색하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등 인식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세

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4. 시사점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19~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안정된 주거 마련(4.24점), 본인의 경제적 여건(4.18점), 본인의 일과 직장(4.17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혼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본인의 경제적 여건(4.33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본인의 일과 직장(4.24점), 안정된 주거 마련(4.21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혼여성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 외에도 미혼여성의 경우는 공평한 가사 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4.38점),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4.33점), 배우자의 일과 직장(4.29점)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9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남성의 경우 자녀 출산 결정에 있어서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55점), 본인의 안정된 직업(4.32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24점), 주거 여건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그림 16> 결혼 및 자녀 출산의 주요 요인

(4.2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결정에 있어서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72점),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4.36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27점), 주거 여건(4.27점),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가능성(4.15점),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15점), 배우자의 육아 분담(4.10점), 본인의 안정된 직업(4.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건강 요인, 고용과 주거 등의 경제적인 여건, 보육 및 양육 서비스의 이용성과 같은 인프라 요인, 본인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더이상 효과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의 결혼과 자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이라는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소: 세종시 시청대로 370

전화: 044-287-8110

메일: sylanne@kihasa.re.kr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장인수·이삼식·이철희·신손문·신성호·박현경·손인숙·손호성·오수영·최용성(2019):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학회(2016): 인구대사전』, 통계청.
- Philipov, D., Liefbroer, A. C., Klobas, J. E.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Springer.

〈彙 報〉

1.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총 17회의 ‘CDJ 대학원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7월 6일~ 11월 18일)
2.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KBER Summer Institute: Macroeconomics II’ 를 주제로 하계 연구회를 개최하였다.(8월 11일)
3.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는 ‘계량경제 방법론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8월 12일~13일)
4.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KBER Summer Institute: Econometrics’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8월 12일~13일)
5.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2022년도 분배정의연구센터 하계 워크숍(CDJ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8월 16일~8월 18일)
6.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경제: 이인호 교수 정년기념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8월 29일)
7.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는 ‘2022년 한국계량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14일)
8.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2022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경제 세션을 지원하였다. (10월 14일)
9. 이 근 교수가 제41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0월 18일)
10. 윤참나 교수가 제11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0월 18일)
11.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거래’를 주제로 2022년도 한국응용경제학회 정책 심포지엄 정책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10월 25일)
12.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시장과 윤리’를 주제로 2022년도 정치경제철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10월 28일~11월 4일)
13. 안동현 교수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0월 31일)
14. 전영섭 교수가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11월 2일)

15.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경제와 정의’를 주제로 2022년도 정치경제철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11월 11일~11월 25일)
16.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는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11월 16일)
17.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혁신센터는 ‘경제학 속 경제사-장기적 관점 또는 역사적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2022 경제사학회 한국경제 발전 세션을 지원하였다. (12월 2일)
18. 류근관 교수가 김준보 메달을 수상하였다. (12월 5일)
19.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Positive Theory of Behavior, Institution and Social Welfare’를 주제로 CDJ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2월 23일)
20.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동반성장과 ESG’를 주제로 CDJ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2월 29일)
21. 본 연구소는 2022년 2학기 주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가졌다.
 - 장용성 교수(서울대학교):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9월 16일)
 - Dmitry Shapiro 교수(서울대학교): Quality Communication via Cheap-Talk Messaging in Experimental Auctions (9월 21일)
 - 이치훈 박사(국제금융센터): 미국의 대중국 연합 전략 향방과 한중의 경제 역학 구조 진단 (9월 28일)
 - 구윤철 특임교수(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경제학도들의 역할 (10월 19일)
 - 홍기현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의 방법론적 특성: 유용성과 한계 (11월 23일)
 - 황윤재 교수(서울대학교):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과 정책적 함의 (12월 14일)